

“농생명산업 특화해 국가 거점화 하자”

김관영 도지사, 농기원서 영농 추진 상황 점검 도 농업기술원, 신기술 접목 고품질 농산물 개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비전을 선포하고 나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농생명산업 추진 현장을 찾아 담당 과제를 점검하는 등 ‘혁신성장’, ‘농민행복’이라는 목표의 실행력을 높여가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11일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을 방문해

현안 업무 보고를 받고 주요 현장을 점검했다. 농업기술원 성과전시물과 병해충실험실 등 주요 연구시설을 살펴보고 관계 직원도 격려했다.

이날 △애그테크 기반 연구 △치유 농업 기반 조성 △벼 품종 다양화를 위한 기술지원 △새만금 간척지 농업기술 실용화 적용 연구 △농업경쟁력

갖춘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기후변화 대응 위협요인 관리 및 신소득작물 발굴 △과수화상병 대응 사전방제 추진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미래농업을 대표하는 애그테크(Ag-tech)는 농업(Agricultur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최근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소비패턴 변화 등 다양한 변화에 대응해 기존 농업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첨단기술을 융복합한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실내 수직농장, 재생농업, 대체식품 등이 있다. 김관영 지사는 이어 전북형 특수

비인 ‘다복질’ 품종과 천마 스마트팜 재배기술, 씨없는 수박 재배기술 등 농업기술원이 개발하고 있는 신제품과 첨단 농업기술을 살펴보았다. 사인머스켓 이용 기능성 저알콜 와인, 약용 버섯 커피 등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상품과 신기술 접목 고품질 농산물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둘러봤다.

이후 김 지사는 병해충 실험실을 방문하고 토양분석 연구실을 점검하기도 했다. 병해충 실험실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돌발 병해충 모니터링, 유전자 분석을 통한 정밀 진단, 주요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관리기술 등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토양분석실 연구실에서는 연간 3,086건의 농업환경 자원에 대한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온실 시험에서는 잠미 신품종을 연구하는 잠미온실과 바나나 유전자원 특성검정 및 안정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바나나온실을 점검하기도 했다.

최준열 농업기술원 원장은 “신제품 육성과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첨단 정밀 농업기술 현장 확산 등 연구·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와 현장 점검에서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해는 농생명산업을 전북자치도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해 국가적으로 거점화하는 원년으로 삼자”며, “농생명산업의 생산, 가공, 유통 등 농생명산업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과 지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11일 익산시 서동로에 위치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을 찾은 김관영 도지사가 현안 업무 보고를 받고 성과전시물과 병해충실험실 등 주요 연구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겨울 가장 숨쉬기 좋았다

초미세먼지 농도 최근 5년 중 가장 좋아 1~4차 계절관리제 운영 결과 18.4% 개선

지난해 겨울 전북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낮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북자치도가 운영한 계절관리제가 실효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한 결과 1~4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 25.6 $\mu\text{g}/\text{m}^3$ 대비 18.4% 개선된 20.9 $\mu\text{g}/\text{m}^3$ 로 역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최저 농도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초미세먼지 좋음(15 $\mu\text{g}/\text{m}^3$ 이하) 일수도 47일로 최근 4년 동기 평균 31.2일 대비 약 6일 증가했다.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대기오염 저감정책을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행됐다.

기상여건 및 국외 유입 등으로 인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제4차 기간을 제외하고, 계절관리제 시행 전과 비교하면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4차 대비 유리한 기상여건과 계절관리 기간 중 강화된 대기오염 저감정책에 따른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에서는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생활, 산업, 수송 등 6개 분야

15개 사업에 대해 강화된 저감정책을 추진했다.

먼저, 도는 농업·생활 분야에서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총 129만 8천톤의 영농부산물을 수거 및 처리했으며, 불법소각 444건을 단속해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750만원의 과태료 부과했다. 또한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78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흡한 3개소에 대해 개선 조치토록 했다.

수송분야에서는 도내 주요 도로 및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1만1,258대에 대해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차량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구간 41개소(166.8km)를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하고 하루 2~4회 도로청소를 실시했다.

산업분야에서는 주거지 인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48개소를 중점 점검해 위반행위 1건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48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시·군 민간 점검원을 활용해 불법소각, 대기·비산먼지 사업장 등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실시해 위반행위 9건(불법소각 3건, 비산먼지 3건, 배출사업장 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390만원을 부과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정책, 도민이 함께 만들어가요”

신규단원 선발 등 전북생활공감정책참여단 새단장 시군별 소규모 자체활동 지원 등 활성화 전략 추진

전북자치도가 도민의 정책 참여를 이끄는 전북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체질 개선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있는 생활공감 정책 아이디어를 상시 발굴하기 위해 ‘전북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하 참여단)의 다양한 변화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국민이 직접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제안하고,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선발·운영 중인 제도다. 전북자치도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활동 실적이 없는 미활동자를 해촉하고 신규단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규단원 신청은 소통24(www.sotong.go.kr)에서 오는 15일까지 할 수 있으며, 입기는 2025년 2월 28일까지이다.

또한 도는 참여단이 보다 도정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정 현안을 제안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소통24는 정부의 주요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정책 제안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에 도정 현안과 관련한 정책을 제안하면 채택 여부와 관계 없이 1만 원

상당 은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채택돼 5만 원 상당 인센티브를 받은 정책 제안 참여단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도는 지역 정책참여, 나눔 봉사활동, 정책제안 관련 토론회·간담회 등 시군별 소규모 참여단 자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이는 별도의 시군별 예산이 없는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참여단 활성화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함이다.

각 시군은 자체 활동계획을 활동 2주 전까지 도에 제출하고, 도는 시군별 적정성을 검토해, 각종 행사 추진 시 필요한 물품구입비를 시군 당 2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더불어 도는 시군, 참여단과 함께 행정안전부에서 새로 추진하는 생활공감정책 제안경진대회 개최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제안경진대회는 참여단과 시군 공무

원이 팀을 구성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지역맞춤형 문제해결 프로젝트’다.

전북자치도는 3월부터 시군 공무원 9명, 참여단 44명이 9개 팀을 꾸려 제안경진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도에서 팀별로 제출한 성과보고서 중 우수사례 발표작을 선정하며, 행정안전부가 최종 상위 5개 팀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차지행정국장은 “생활 속에서 느끼는 사소한 생각이 정책 아이디어가 되고, 곧 도정을 바꾸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제9기 전북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 열정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2009년 주부모니터단으로 시작해 2019년에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전북은 제9기 참여단 73명이 지난해 3월부터 전업주부,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돼 2년 간 활동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중증·응급환자 이송·대응체계 강화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응급의료센터장 등 만나 협력방안 모색

전북자치도가 의사집단 행동에 따른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오후 4시 도청 회의실에서 지역응급의료 실무협의체를 개최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응급의료 실무협의체는 응급의료이송체계와 응급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강영석 도 복지여성보 건국장을 위원장으로 권기현 전북소방본부 119대응과장, 도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장, 전북응급의료지원센터장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북응급의료지원센터가 참석했으며, 각 기관들은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도내 응급환자 병원 이송 체계 및 대응 사항 공유와 기관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활성화 △상급병원과 종합병원간 진료협력체계 강화 △진료과목별 전문(특화)의료기관 적극 활용을 통해 신속한 환자 이송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소방본부에 협조 요청과 함께 24시간 응급의료기관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